

전북 내년도 예산편성 키워드는?

공약사업·세계잼버리·일자리 창출도, 12월까지 5개월간의 대장정 돌입

전북도는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21일 전북도는 도정 3대 핵심사업 및 공약사업의 완성도 제고, 2023 세계잼버리대회 준비를 위한 연계사업, 청년대책 등 전북형 일자리창출사업, 도민생활과 밀접한 수혜도가 높은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2018년 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과 전라북도 자체예산 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과계획서 작성방안 등을 각 사업부서에 통보했다.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주요 개선사항은 '기준경비의 개선으로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점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도입▲업무추진비 자율권 부여▲특정업무경

비 선택항목 지급대상 및 금액 자율 결정▲비정규직 등에 대한 차별적 요소 개선▲행사 축제경비 총액한도제 폐지다. 또한 전북도에서는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대응하고, 건전재정 운영과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 ▲재정사업 관리 강화▲재정 지출의 효율화▲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재정운영의 신뢰성 강화다. 주요 편성일정은 우선, 법정 의무적 경비의 경우 8월 25일까지 요구를 시작으로 계속사업은 8월 31일까지 받아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에 맞추어

9월 8일까지 각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제출 받아 도민 여론 조사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10일까지 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변화하는 예산제도와 재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엄격한 세출관리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도 핵심사업 및 세계잼버리 연계사업 등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고품질 한우생산 기반 구축

도 동진강낙협,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공모 추가 선정

전북도는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동진강낙협(김제시)이 추가 선정돼 국비 9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산 조사료 이용증진 및 도내 낙농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도는 이번 사업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를 지속 방문해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해당 시·군과 공동 대응하여 서류심사와 현장평가에 철저히 준비, 노력한 결과 이뤄낸 성과로서 낙농 TMR공장 신축을 위한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된 것이다. 조사료 TMR가공장은 소가 필요로 하는 영양요구량을 충족하도록 조사료와 농후사료 등 여러 종류의 사료를 혼합 제조·생산하는 시설로 동진강낙협은 김제시 금구면에 부지면적 8,036

㎡를 확보하고 총 35억원을 투입하여 TMR가공시설을 신축하게 된다. 도내 350여 낙농가의 50% 이상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진강낙협의 이번 TMR가공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16천톤의 양질의 TMR사료를 생산해 낙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TMR사료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수입건초의 30%이상을 국내산으로 대체하여 매년 120ha정도의 조사료 재배면적이 확대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선정으로 도내 낙농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벌크 TMR 농가공급을 확대하여 고품질에 따른 노동환경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과학기술 50년사 살펴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핵심정책 토의 전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과학기술 50년사를 받고 있다.

지방출자기관 임직원 영리 업무 겸직 금지

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기관 업무 외에 영리 업무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겸직사유 등 엄정한 복수관리를 통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한다. 임원의 겸직사유에는 성폭력범죄 관련 판결을 받은 경우와 기관장이 경영성과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된 경우 등이 추가된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 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한다. 또 임·직원에 대한 수사·감사기관의 조사·감사 개시와 종료 시 소속 기관에 대한 통보 규정을 마련,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운영의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를 확대하고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국민 신뢰와 책임성도 강화한다. 재무구조 변경,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해 주요사항 변동 시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고 허위 공시를 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시의 책임성을 높인다. 이번 개선편이 반영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은 23일부터 10월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

임실천, 관광명소로 재탄생

국토부 경관개선사업 선정 친수·녹지공간개발

임실군의 대표하천인 임실천이 아름다운 친수·녹지공간으로 본격 개발됨에 따라 지역관광과 경제발전을 주도할 핵심거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21일 임실군은 국토교통부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지역수요 맞춤형사업에 임실천 경관개선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지역수요 맞춤형사업을 신청한 전국 70개 시·군 중 19개 지자체를 선정·발표한 가운데 임실군은 지역경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사업대상 지역에 포함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모사업 선정 과정은 경쟁율이 치열한 만큼 까다로웠다. 국토부는 신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개발사업공모선정위원회를 통해 서면과 현장평가, 사업발표회 등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국비 18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임실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으로 인한 새로운 녹지공간 조성 필요성과 임실치즈테마파크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문화관광 명소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킨 게 높은 평가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내년부터 총

사업비 40억원(국비20·군비20)을 투입해 '생활 속 숨쉬는 아름다운 임실천 만들기'를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임실천 주변 공간에 가로수 이식과 하천분수(1개소)를 만들고, 자투리공원(780㎡)과 임실교 및 봉황교, 운수교 등 세 개 교량 450m구간에 대한 인도확장, 교원식 교차로 조성(4개소), 경관조명설치(45개소) 등이다. 이 사업은 내년 최종 마무리를 앞둔 임실천 정비사업과 맞물려 친수공간 및 녹지공간으로서의 임실천 조성에 매우 효율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일진제강과 35사단 이전에 따른 인구증가와 함께 임실치즈테마파크와 119소방안전체험관, 35사단 임·퇴소식 등 외지방문객을 유치시키는 유망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군은 앞으로 임실천을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공원으로 조성해 주변 관광지는 물론 임실읍내 5일장, 임실N치즈축제 등과 연계해 필봉농약 등과 같은 문화공연을 유도하는 핵심거점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의 새싹,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 전년도 61개소→488개소 대폭 확대

전북도는 환경유해물질 등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놀이시설, 어린이집)의 환경안전 관리기준 준수여부 지도점검을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점검은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환경보건법 적용을 받는 도내 2,629개소(어린이집 546, 놀이시설 2,083) 중 488개소에 대해 실시할 계획으로 어

린 활동공간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 2016년 61개소에 비해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800%)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실내내 어린이집 보육실의 문, 벽, 창틀, 바닥 등의 페인트, 시트지 등 마감재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측정 및 실내공기질 준수여부이며, 실외는 놀이시설 등의 부식여부 및 페인트가 칠해진 시설 및 바닥재의 중금속 함유여부 등으로 중금속 측정의 경우 중금속간이측정기를 활용해 측정 할

계획이다. 시설 점검결과,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 개선명령 조치할 계획이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환경유해물질에 더 취약한 만큼 이번 지도점검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한 활동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예방적·선도적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